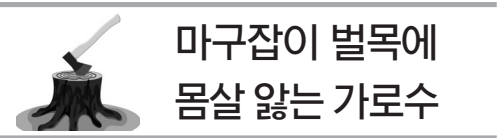


# “단순 시설물 아닌 생태계 자산”...가로수 인식 전환 절실



마구잡이 벌목에  
모살 않는 가로수

〈하〉 체계적인 보호·관리하려면

#. 광주시의 가로수는 보호를(가로 1.5·세로 1.5 m) 안에서만 자란다. 폭 2.5m 이상인 인도에만 설치되고 그나마 가로수를 뺀 보행 공간(최소 1.5m)을 확보해야 하는 국토교통부의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고려하면 가로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은 최소 1m 남짓에 불과하다. 이 공간에서만 가로수가 성장하는 셈이다.

광주 도심의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산 구조부터 조레, 행정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광주 지자체가 가로수 벌목, 이식을 결정하는 구조를 넘어 생육 환경부터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도시숲 조성은 커녕 생색내기식 가로수 식재만 무한 반복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우선 지자체 차원에서 가로수 유지·관리에 대한 충분한 계획과 예산을 갖추고 생태적 가치를 고려한 행정 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 지적이다.

1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가로수를 벌목·이식하는 데 대한 별도의 계획이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유지관리비 예산도 생색내기 수준이다.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화단 관리 등으로만 책정돼 있다. 공사로 인한 가로수 이식이나 벌목 비용은 시공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자치구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치구 관계자들 설명이다.

시공사는 벌목보다 이식하는 비용이 더 저렴한 만큼 벌목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벌목, 이식 비용은 수종, 가로수의 상태와 주변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이식을 할 경우 벌목 시보다 2배의 비용이 투입된다고 한다.

1m 남짓 좁은 생육 공간 문제 성장 빠른 수종, 매설물 얹힐 수도 도심 환경에 맞는 수종 개발해야 이식·벌목 비용은 시공사 부담 예산·조레 등 총체적 변화 필요

원상회복비용도 나무의 생태적 가치를 담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자치구는 최근 공사 과정에서 가로수 65그루를 제거하면서, 흉고직경(가슴높이 지름) 25~45cm에 해당하는 대경목의 평균 가치를 1그루당 약 390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 자치구는 이 점을 토대로 흉고직경 12cm 이상 나무 56그루를 재식재하는 데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나무 원상회복비용으로 총 2억 1000여만 원을 발주처에 부과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원상회복비용이 수십년간 축적된 탄소 흡수와 미세먼지 저감 등 생태적 가치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가로수 훼손 시 미래 생태 가치와 대체 부지 확보 비용을 포함한 '녹지 손실 부담금' 도입과, 가로수 제거 결정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의무화,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각 자치구가 지하 매설물에 뿌리가 얹혀서 "어쩔 수 없이 벌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도, 결국 제도와 행정의 무관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애초 가로수를 지나치게 좁은 공간에 옥여넣어 키우는데다 그늘을 빨리 만들겠다며 성장 속도가 빠른 수종을 선호하다 보니 뿌리 얹힘 문제는 자연스럽게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부 현장에서는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1.5~2m까지 넓히기도 하지만, 조레에 명시한 기준은 없어 자치구 판단에 맡겨져 있다.

더욱이 가로수를 심을 공간의 폭, 너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없는 상황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광주시 동구 계림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왼쪽)과 서구 중앙근린공원 2지구 개발 공사 현장에 베어진 나무들.

“산림청 매뉴얼은 재해 중심이고, 광주시와 자치구 조레에도 세부 기준은 없다”며 “광주시 차원에서 가로수 제거·이식·보존에 대한 공동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규홍 나무 칼럼니스트는 “1.5m 남짓한 공간에서는 나무 뿌리가 충분히 뺄 수 없어 오래 살기 힘든 구조”라며 “나무 생장을 전제로 한 생육 공간 확보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종도 문제다. 광주시 도시에 주로 심어진 수종은 은행나무, 느티나무, 왕벚나무, 플라타너스 등인데, 이들은 생장이 빠른 만큼 뿌리도 빠르게 자라 지하 매설물에 얹힐 가능성이 높다.

강기호 백두대간수목원 나무의사는 “싱가포르나 프랑스는 도시를 계획할 때부터 나무에 3m 이상의



광주시 동구 계림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왼쪽)과 서구 중앙근린공원 2지구 개발 공사 현장에 베어진 나무들.

충분한 공간을 부여하는데, 우리나라는 그에 못 미치고 있다”며 “더구나 그늘을 빨리 만들기 위해 성장 속도가 빠른 수종 위주로 가로수를 선택하다 보니 전선과 하수관 등 기반시설과 얹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에따라 광주, 나아가 우리나라 도시 환경에 맞춰 도시숲을 조성하고 가로수를 지키기 위해서는 도심 환경에 맞는 가로수 전용 수종 개발과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운구 전남대 조경학과 교수는 “단순한 이식 여부가 아니라, 어떤 가로수를 어떤 기준으로 관리·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가치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오늘 1심 선고 생중계

윤석열 피고인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 재판이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피고인의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되는 형태로 공개된다. 다만, 법원은 기술적 사정에 따라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이번이 세 번째다.

법원은 지난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해 7월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2018년 10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됐다.

윤 피고인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 지난해 7월 추가 기소됐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총리와 김윤환 전 국방부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해 폐기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연합뉴스

## ‘대표도서관 붕괴’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압수수색

경찰, 공무원 4명 등 22명 입건

경찰이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 공사 발주처인 광주시(종합건설본부)를 압수수색했다.

노동당국도 사고 원인 조사 결과 등을 검토해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 수사가 공사를 총괄한 최고 책임자인 광주시로 향할지 주목된다.

광주경찰청은 15일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된 공사 관계자 등 2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한 달 동안 “입건 인원 수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사고 피해자 유가족과 시민사회로부터 ‘수사 미진’ 질타를 받아 인원을 공개했다. 입건된 인원 중에는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광주시 소속 공무원 4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광주시장의 경우 사고 간 인과관계를 확정 짓기 어려워 입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이날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를 뒤늦게 압수수색해 공사 관련 업무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동안 공사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받아

수사를 진행해 오다, 미처 제출받지 못한 자료가 남아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한달 여 만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사고 직접 원인과 업무처리 과정의 구조적 문제, 불법행위 여부를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현재까지 시공사 대표와 현장소장, 하청업체 관계자 등 3명만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당국은 향후 사고 원인 조사가 이뤄지는 데 따라 공사 관계자를 추가 입건할지 여부를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 공공발주 공사장 안전조치 미흡 141건 적발

38곳 대상 민관합동 특별점검

광주시가 대표도서관 건설현장 붕괴사고 이후 공공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140건이 넘는 안전조치 미흡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공공 발주 건설공사현장 38곳(토목 30곳, 건축 8곳)을 대상으로 ‘공공발주공사(토목·건축) 긴급 민관합동 특별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공사장 38곳에서 141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했다. 시정 조치할 사항으로 57건, 현지조치 30건, 지도 38건, 개선 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과 유사하게 콘

크리트 타설 등 작업 중 붕괴 예방 조치가 미흡하거나, 추락·낙하 방지시설 및 안전간 설치 미흡한 사례가 여러 현장에서 반복 확인됐다.

가설분전함을 개방된 상태로 방치하거나 유해·위험물질 표기(MSDS)를 누락하는 등 전기·화재 위험 관리가 미흡한 현장, 절단기 안전덮개 등 건설기계 방호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현장도 적발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위험사고 모니터링 의무화 등을 통해 현장 내 만연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작업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동영상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한 사람의 보험비지  
전 국민의 경제부담

#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병원 입원 알바』  
고수의 보장  
보험 가입 필  
http://X&3@%M%T

알바 댄는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STOP

#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SEoul NATIONAL POLICE AGENCY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손해보험협회  
Korea Marine Insurance Association



IGAFA 보험GA협회  
보험사기행위 예방을 위한